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대러 협력방안: 경제적 측면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 한국의 對북방 경제협력 추진방향

-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정책을 발표하면서 극동지역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발표
 - － ‘9-bridge’ 정책은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제안
 - － 지난 ‘18년 6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하였으며 향후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 중이며
- 2018년 6월 18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러시아 등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력전략을 명시화
 - － 신북방정책의 14개 중점과제 중 12개가 ▲북·중·러 접경지 소다자 협력활성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산업협력 고도화 등 3개의 경제적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음.
 - － ① 북·중·러 접경지 소다자 협력활성화에는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추진 등을 통한 환동해 관광협력과 북·중·러 접경지에 경제특구 개발 등의 초국경 경제협력이 포함
 - － ② 통합네트워크 구축에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의 물류·에너지 사업이 포함
 - － ③ 산업협력 고도화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확대 등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 중심
- * 다른 2개의 중점과제는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양성’ 임.

II.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함의

- (경제적 보완성 강화) 미국·중국 등에 지나치게 편중된 한국의 대외경제구조를 보완

-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G2국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보호무역주의와 무역분쟁이 확대되는 시기에 수출위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북방국가와의 협력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효과 기대
- 현재 북방경제권 국가 전체에 대한 한국의 교역은 전체 교역액의 약 2.2%, 투자는 0.3%에 그치는 등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성장의 여지가 큼.
- 다만, 현재의 구도에서 북방시장이 미·중 중심의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구도를 단기적으로 대체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나친 편중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보완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대륙연계성 확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9-bridge’ 연계사업은 남·북·러를 포괄하는 대륙으로의 지리적 연계성을 복원하여 ‘한반도 신경계구상’ 등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

- ‘9-bridge’ 정책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중점을 둔 산업별 협력 안을 담고 있으며 남·북·러 3국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발전 가능
- 천연가스 협력,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계한 철도, 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는 남·북·러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과 연계

< 한반도 신 경제지도: 3개 경제벨트 >



-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안의 에너지·자원·관광 연계망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나선·청진 경제권, 원산·함흥 경제권, 단천 경제권을 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여 경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적 소통과 연대 강화 목적

○ (상호 동반성장 기반마련)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 한국과 북방경제권 국가들의 교역구조는 한국의 기계·자동차류 수출과 원유·천연가스·광물 등의 원자재 수입이라는 단순한 교역 패턴이 고착화
- * 2000년대 초-중반의 원자재 호황기와 북방국가들의 원자재 의존 경제구조 지속으로 관성적인 교역구조가 자리 잡은 결과
- 현재 각 국가들이 자원의존을 타파한 산업다각화와 제조업 육성 등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ICT 기반의 산업화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산업협력 강화는 양국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
- * 러시아는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고도화·다각화를 추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역시 산업기반육성을 국가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발전정책 시행
- 질적인 성장기반 마련은 북방국가들의 산업화 수요에 부응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극단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경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

○ (기업진출 실용성 확보)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 제시

- ‘한·러 기업협의회’를 출범하여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간의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및 진출 시에 맞게 되는 애로점 등을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제 마련
-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임과 산업부문에 따른 정기적인 분과모임을 개최하여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
- * 회원사에는 러시아 진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 진출에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의 플랫폼 역할 가능

Ⅲ. 대러 협력방안

1. 러시아 혁신산업 육성정책 대응

□ 주요 이슈 및 정책

- ‘18년 5월 7일 푸틴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동시에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과제』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으며, 혁신성장정책 목표 다수 포함
 -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인프라 마련
 - －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등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 －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건설 등 경제·사회 우선영역에 디지털 기술 도입
 - － 혁신기술 분야 종사자 수를 최대 50% 이상 증가시켜 러시아의 경제성장 속도 견인

< 러시아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

- － 러시아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3.9%에 머물고 있어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3배 성장한다면 러시아 GDP 성장 기여율은 19-34%에 이를 것으로 판단
- *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EU 등은 각각 디지털 경제비중이 10.9%, 10.0%, 8.2%에 이르고 있음

- － 주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에 ‘2035 국가기술혁신(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 러시아 국가기술혁신 주요 분야 >

영역	9개 분야	중점분야
안전 및 자원	EnergyNet	개인전력생산과 스마트그리드의 전력분배 (로드맵 승인)
	FoodNet	개인 맞춤형 음식 생산, 공급 시스템 (로드맵 준비)
	SafeNet	개인맞춤형 안전시스템 (로드맵 준비)
수송 체계	AutoNet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분산제어 네트워크 (로드맵 승인)
	AeroNet	무인 항공기의 분사 제어 시스템 (로드맵 승인)
	MariNet	무인 자율 해상운송시스템 (로드맵 승인)
삶의 질	HealthNet	개인맞춤형의료 및, 디지털의료 (로드맵 승인)
	NeuroNet	인공의식 및 지능 분야 (로드맵 승인)
	FinNet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 및 통화 (로드맵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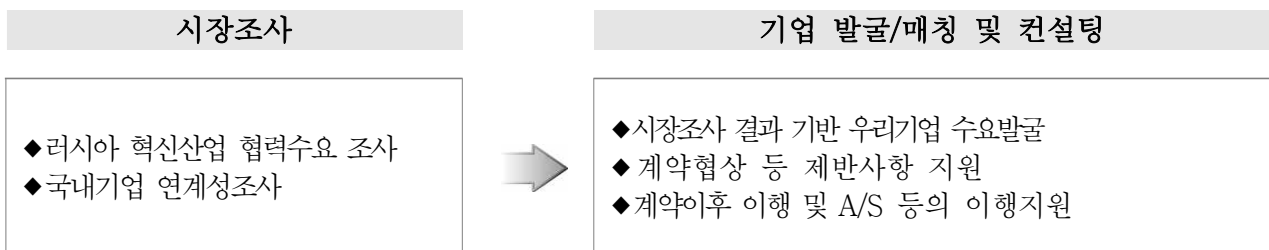
* 자료 : NTI 홈페이지

□ 협력 방안

-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기술교류/고급 인력 교류를 통해 혁신산업의 공통 육성 분모 추출 및 자원투입 필요

- 기술 및 고급인력 교류를 통해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공동 R&D사업 추진 및 공동 R&D 성과 상용화 지원 활성화
 - * 다만 전자제품, 기계류, 선박, 금속가공, 농산물 가공, 화학제품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혁신 기술 접목 가능성여부 타진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장기적으로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협의

- o 2019년 설치 추진 중인 ‘한-러 혁신 센터’를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스타트업 협력, 시장진출 지원 사업 복합 수행



- o 기술역량이 높고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 러시아 ‘기술 혁신경제특구’ 입주기업 및 대학 연구소 스핀오프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혁신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o 의료·제약, Smart농업, 기계·산업설비 등 신성장 산업 및 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품목기업 다변화

2. 對러시아 경제제재 우회협력

□ 주요 이슈

- o 2014년 이후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재의 직접 대상국인 러시아와 CIS 국가에 부정적 영향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재 당사국 기업에도 영향
 - 러시아는 제재 직접대상국으로 자원개발, 군수, 금융 등의 분야에 타격
 - 경제제재에 참여한 자국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당국 기업들은 특정 러시아 기업과 특정 영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며 위반 시 정부 제재 우려

-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 산업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 압박
- (미국) 적성국 대응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정('17.8)으로 제재강화 및 추가 제재안 준비 중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단계 강화 >

- 미국은 수년 간 러시아의 핵심인사 및 기업에 대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여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일정부분 의도한 효과 부각
→ 에너지, 금융 등 주요기업의 신규 사업 추진과 외환거래에 부정적 영향
- (EU) 미국과 공조하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군수, 금융분야 제재지속
 - * 다만, 독일, 이탈리아 등 EU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거나 장기간의 제재를 이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일본)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국 경제 주체의 활동을 제한
 - 기업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주체들은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적 경제관계를 지속

□ 협력 방안

- 한국은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직접 참여국이 아니나, 미국 등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서방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 마련 필요
- (회피전략 ①) 기업 간 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 자원분야에서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어있어 기업 간 협력이 아닌 정부 간 협력으로 제재회피
 -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정부 간 협력은 제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안의 하나

< 러-노르웨이 정부 간 자원조사 협약 >

- 노르웨이 석유국(NPD: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은 러시아 천연자원관리국(Rosnedra)과 공동으로 북해인근 바렌츠해(Barents Sea) 인근 지역의 지질관련 정보교환에 합의(2016.10)
- 노르웨이 정부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이 아닌 정부차원의 협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동자원개발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정부 간 협약체결

○ (회피전략 ②)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

- *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으로 공공기관이 양국의 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활용

○ (회피전략 ③)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 미국과 서구가 지정한 제재대상 금융기관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
- * 러시아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서구의 제재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금융기관 활용
- 일본은 러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서 제재대상인 러시아 은행을 통한 여신제공이 아닌, 지방은행 등의 비제재대상 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협력방안 모색

○ (회피전략 ④)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영역조정

- 미국 등 서구의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업파트너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범위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재우회가능
- * 경제제재의 위반은 제재대상과 제재범위(사업)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3. 인프라 개발 확대에 대한 기업참여 모색

□ 주요 이슈

○ 푸틴 4기 정권의 주요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과 경기촉진 추진

- 러시아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개선을 신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 인프라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18→20%) 등 세수마련 추진

< 러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

- 화물 수송을 위한 'East-West' 및 'South-North' 교통로 개발: △화물 운송로 연계 복합 물류단지 조성, △Europe-Western China' 국제운송로 내 러시아 자동차 구역 건설, △항만 화물처리 능력 개선, △북극항로 개발 및 물동량 증대 등
-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대도시 간 고속철도 건설 기반마련 △지역공항 인프라 건설 및 정기 항공노선 확대 등
- 전력 확보: △각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전력 공급,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 협력 방안

○ 자재 등 자국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 현지기업을 통한 우회 수출 모색

- 인프라 개발은 대규모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가급적 자국 제품·부품 사용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철도 장비·기자재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한국과의 높은 물류비를 감안할 때 우리 완제품은 수출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현지기업에 부품 수출 중심의 시장접근 또는 현지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특정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수출 중심의 접근이 유효
- 단순 인프라 개발 참여보다는 장기간 인프라 운용 등 운영효율화와 경영참여 등을 통해 운영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기술적 접근 필요

○ 다자개발은행 지원 동향 모니터링 강화

- 인프라개발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각국 정부 재정 외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 활용해 추진되는 양상
- 다자개발은행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련 다자개발은행이 게재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공청회 및 입찰 공고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4. 소비시장 회복에 따른 소비재 진출 촉진

□ 주요 이슈

-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회복에 힘입어 러시아 경기회복세 지속

- 러시아의 '19년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약 1.8%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5-'16년의 경기침체에서 점진적 회복세 지속
- 타 CIS 국가들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5.6%, 타지키스탄 5.0%,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각각 4.8% 성장 등 높은 성장세 지속 예상

< 연도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

연도	2015	2016	2017	2018(f)	2019(f)
성장률(%)	-2.5	-0.2	1.5	1.7	1.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

-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경기침체 이전의 소매심리 수준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의 소매거래량은 '18년 들어 분기별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1분기) 2.4% → (2분기) 2.9% → (3분기) 2.6%

□ 협력 방안

- (단기) 러시아 내 한류 선호트렌드 지속에 따라 한류를 활용한 우리 소비재 판매 행사 연계 등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기회 활용
 - 최근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소비개선 수혜분야 확대
 - 광활한 영토에 따른 상권분산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공략
- (중장기) 범용 제품이 아닌 지역 특화상품의 개발
 - 러시아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소비재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로 경기변동의 영향 최소화